

2021년 안전감찰 활동 기본계획

조 성(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cksaint@cni.re.kr)

CONTENTS

1. 서론
2. 안전감찰 제도 개요
3. 안전부패 실태와 감찰활동 수요분석
4. 안전감찰 목표 및 기본 방향
5.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6. 결론

요약

- 안전감찰 활동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최근 언론보도 및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도가 2021년 안전감찰활동을 위해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급증하고 있는 대형사고의 원인에는 첫째,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둘째,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셋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 넷째,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대처, 다섯째, 비리와 부실이 정상이 사회 풍조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안전을 해치는 불법관행을 근절한다는 방향 하에 안전감찰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고, 도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목표 실현을 위하여 세 가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각 전략별 추진과제를 제안함

전략1.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감찰

- ①생활 밀착형 시설 안전관리(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②공영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③하천수문 운영관리 실태

전략2. 4계절 즐거운 삶을 위한 감찰

- ①축제 안전관리 실태, ②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전략3.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찰

- ①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관리 감찰

-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안전부패와 만연한 생활속 불법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관계기관의 관심과 도민의 참여유도가 성공적인 감찰활동의 성과를 좌우하게 되므로 감찰 결과에 대한 지속관리가 필요함

0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복잡 다기해지는 각종 재난과 더불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체감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이에 생활 속의 위험요소와 재난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관리 함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을 각 지자체에 송부하여 조직개편과 더불어 안전분야 감찰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초기 안전감찰 제도의 방향은 관행적인 부패요인과 안전무시 관행과 토착형 안전비리의 근절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예방조치,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¹⁾
- 재난 사고의 연도별 발생과 인명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등의 현상은 대응·복구 위주의 재난관리 정책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피해저감을 위한 예방·대비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필요함
- 따라서 생활속 위험요인과 재난관리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시정하여 재난발생을 방지하고, 재난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감찰 제도의 활용이 요구됨

1) 재난안전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제77조(재난관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행정안전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근거

- 안전감찰 제도의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년도 감찰활동 실시의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관리 체계, 안전 점검 실태의 진단을 통하여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2021년 충남도가 시행하고자 하는 안전감찰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전략에 따른 실행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점과제 선정 및 부패유발 구조를 파악하여 도 차원의 감시역량 결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 안전 감찰 업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매년 모든 영역의 재난 및 사고 종을 다루기 어려우므로 민선7기 충남도의 정책방향과 안전감찰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한계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2021년 수행하여야 할 과제 및 목표를 도출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춤
- 조사 분야는 기관별 감사사례(안전비위 등), 실제 사고사례, 언론 등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야 외에 주민 신고사례를 통해 도출된 분야를 망라함

● 연구의 기대효과

- 안전감찰 업무의 기본 테마를 설정함으로써, 건축, 산업, 식품안전 등 안전 분야 전(全)영역에서 고질적 안전부패 사례를 발굴·개선하는데 기여함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안전 분야 생활적폐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완화의 미명하에 각종 안전규제를 탈법·편법으로 회피, 완화, 폐지하는 사례에 대한 적발을 내용으로 하여 도민 생활의 실질적 안전 확보에 기여함

● 연구의 정책활용

- 이 연구 자료는 역점 시책화 및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제안, 워크숍 등 대외발표와

안전감찰 시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됨

- 안전분야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안전감찰 시행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관련제도 정비에 활용됨

02

안전감찰 제도 개요

- 안전감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반복적 안전 관련 위법사항 및 사고발생 원인의 자율적 시정을 위한 체계 마련, 안전관리 순환체계(계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환류(feedback), 감찰 사례 확산 및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등의 목적을 가지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 차원의 예방적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음
- 충남도의 안전감찰의 대상 및 범위는 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로 한정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효율적 감찰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일반사항

- 수립배경
 -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 분야의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이 필요함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넓은 범위의 안전 분야에서 안전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으며, 안전 분야의 생활적폐가 만연한 상황임
 - 안전 분야의 불법행위는 사고를 유발하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됨
 - 10년간 안전에 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현재 안전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취약분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안전부패를 방지하고 안전관리의 개선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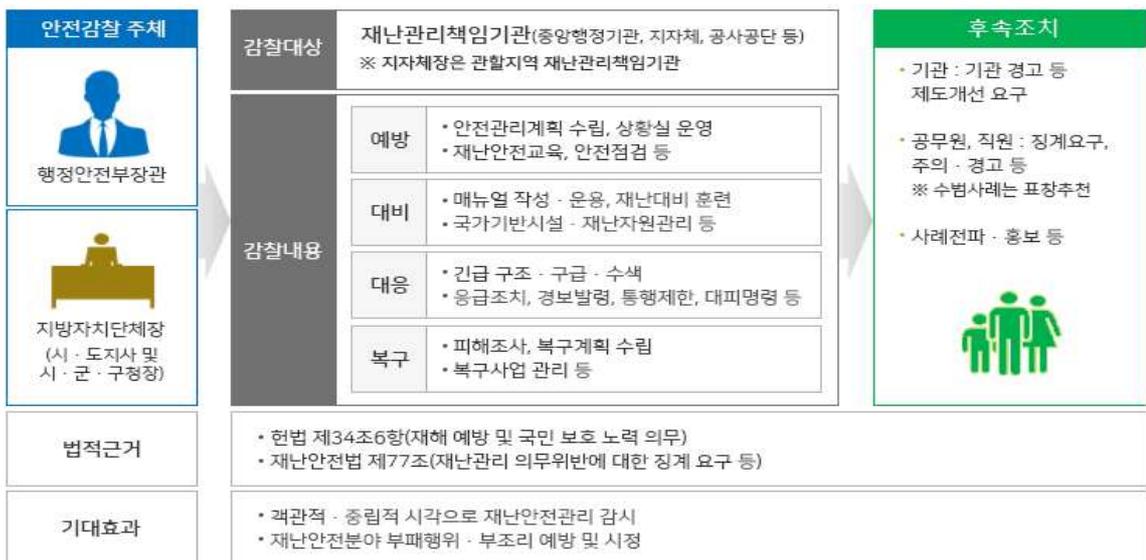
해 도민의 안전신뢰를 높이기 위함

● 법적근거

- 헌법 제34조6항(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노력 의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경고·징계 등을 요구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제77조(재난관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행정안전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에 의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예방조치,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전(全) 단계에 걸친 안전감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성격

- 안전관리체계, 안전점검 실태 등을 심층 진단으로 안전부패 대책 수립
- 안전규제를 탈법·편법으로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사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의 합리적 대책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의 경고 및 징계 등 처분 조치



[그림 1] 안전감찰 개념도2)

2. 안전감찰

- 안전감찰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조사 및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재난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시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항을 처분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
 -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안전감찰관을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반이 되는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름
- 감찰의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중앙 단위 및 관할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함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 공단 등이 포함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으로 정의됨
 -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평상시에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상황실 운영, 안전점검 등의 예방활동과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재난안전 훈련, 국가 기반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재난관리자원 비축 등의 대비활동을 수행함
 - 재난시에는 긴급구조·구급, 응급조치, 경보발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응원 등의 대응활동과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관리와 같은 복구활동을 수행함
 - 안전감찰 활동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토록 하는 대안제시형 안전감찰 실시함
- 안전감찰 활동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7조 제2항)에 관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경고·징계 등을 요구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3. 안전부패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 이후,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고질적인

2) 자료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sub/a06/b08/siTask/screen.do>

원인이 곧 부패라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이윤추구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는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 대형 재난안전 사고 대부분이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토착형 비리, 안전무시 관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안전부패로 정의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음

● 2018년 10월 출범한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부패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사익추구형 : 도덕적 해이에 기반하여 사적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유형

- 안전무시 관행형 : 일처리 편의를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유형

- 지역토착형 : 자기감독의 한계로 안전부패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유형

- 구조적부패 유발형 :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패

1.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안전부패

- 과거 대형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유사한 문제점은 재난관리 전(全)단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1)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감독 부실

- 부적절한 안전관련 규제 및 처벌규정의 미흡
 - ('14년 세월호 사고) 선령제한 완화(당초 20년 → '96년 25년 → '09년 30년)로 선박 노후화가 심화되었음
 - 여객선 안전관리 규정 위반 시 벌금이 3백만 원에 불과하여 안전을 비용과 맞바꾸는 결과를 낳게 됨
- 형식적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체계 부적절
 -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진단 미실시, 형식적 감리 시행
 - ('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 직전까지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미실시
 - ('14년 세월호 사고) 해운조합의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

(2)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 다중이용시설이나 민간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설비 투자 부족
- 안전모와 같은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식 부족

-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전동차 내장재가 PVC,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로 설치
- ('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현장에서 중화제 미비치 및 작업자 보호 장비 미착용

(3)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화

-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화재발생, 연기확산에도 기관사가 대피방송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음
- ('14년 세월호 사고) 감독기관의 부실, 선장 및 항해사의 선박관리 의무 및 승객 보호 의무 위반 등 다수 사례 발생

(4)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인 대처

- 재난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 업무기피현상 등으로 재난관리 전문성 부족 및 효율적 재난관리에 어려움 초래
 - ('11년 우면산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 시 서초구의 경우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피해를 입음
- 상당수 매뉴얼이 포괄적 내용만을 담고 있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용상 한계가 있고, 근무자의 매뉴얼 숙지훈련이 부족함
 - ('11년 우면산 산사태) 산림청이 산사태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하였으나, 지역실정 등이 고려되지 않아 등 실제상황에서 활용 불가
 - ('12년 구미 불산 누출) 구미 산업단지 전체에서 사고이전 3년간 재난대비 훈련은 총 5회, 517명 참여에 그침 (전체 입주업체 600개, 고용자 83,000명)
- 재난현장과 상황실간, 중앙안전상황실과 소방상황실간의 신속한 상황전파가 되지 않아 초동대응 실패 사례가 발생함
 -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발생 이후, 시민들의 반복적인 신고와 제보에도 불구하고 잠수부 투입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어 구조구급에 실패
 - ('14년 세월호 사고) 해경의 사고 접수(8:58분경) 이후 중앙안전상황실에 대한 보고가 지연, 중앙안전상황실은 언론을 통해 사고발생 최초 인식(09:19)한 바 있음

(5) 비리와 부실이 정상인 사회 풍조

● 대형참사 책임 및 관련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

-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292명이 과적·과다 승객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나, 안전점검일지 허위작성 및 과적증거 서류를 인멸한 군산항만청 공무원 4명은 전원 집행유예
-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32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붕괴위험가능성 경고 보고서를 조작한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1명만 1년 6월 실형선고, 다른 공무원 8명 전원 집행유예
-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02명 사망한 사고에서 기소된 공무원 12명 가운데 뇌물수뢰 2명만 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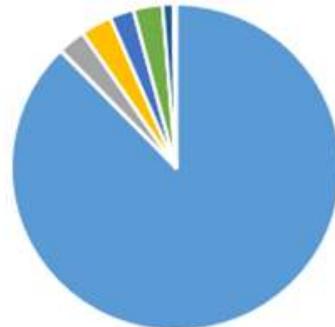
2. 안전신문고 신고 자료 분석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신고 건수는 총 40,798건이며, 이중 개인 신고자에 의한 사항이 37,566건으로 가장 많으며, 민간단체 1,817건, 기업·단체가 1,030건 순으로 나타남
- 신고 분야는 교통분야 관련이 35,756건으로 전체의 87%에 달했으며, 산업분야 1,249건, 시설분야 1,166건, 사회분야 1,098건, 생활분야 961건, 학교 관련 439건, 해양분야 95건 순이었음



■ 개인 ■ 공무원 ■ 기관 ■ 기업 ■ 단체·기업 ■ 민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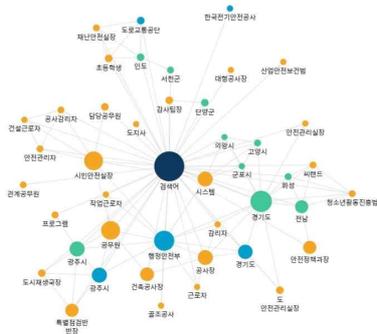
[그림 2] 안전신문고 신고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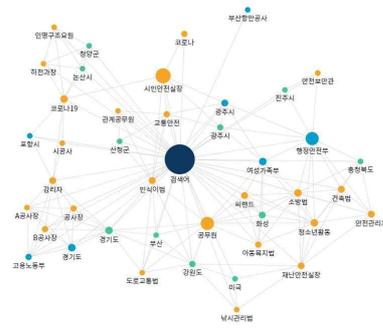
■ 교통 ■ 기타 ■ 사회 ■ 산업 ■ 생활 ■ 시설 ■ 학교 ■ 해양

[그림 3] 안전신문고 신고분야 분포

- 안전신문고 신고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진 건수가 38,7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털



[그림 7] 2019년 지역 일간지 관련기사의 기관 정보 키워드 관계도



[그림 8] 2020년 지역 일간지 관련기사의 기관 정보 키워드 관계도

- 지역일간지 중심키워드에서는 2019년 건축공사, 골조공사 등 건설 관련 근로자 안전 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의 영향으로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등이 이슈가 되었음
- 2020년에는 교통안전관련 민식이법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 등장하였으며, 하천 인명구조, 코로나 관련 사항도 검토되었음
- 청소년 활동, 아동복지법 키워드와 함께 소방법, 건축법 등 관계법규 위반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일간지를 중심으로 활동내용이 더 활발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감찰의 분야가 건축, 공사 및 노동관계, 하천의 인명구조, 도로 교통, 낚시 등 레저활동에도 미치고 있음

4. 행정안전부 감찰 유형

-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행정안전부(과거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안전감찰 사례를 연도별로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2015년은 주로 각종 연습과 훈련, 국가안전대진단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내용이 많음
 - 부작위에 대한 사항을 주 점검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항으로는 구제역, 메르스 대응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함

- 생활 밀착형 부패유형으로 감찰 대상이 된 것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짐
- 2016년은 가장 많은 15건의 감찰이 이루어졌으며, 감찰 활동의 적용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됨
 - 감찰 대상이 되는 부패 유형도 다양하여 사익추구, 구조적 부패 유발, 안전무시, 부작위는 물론 지역토착 부패 까지 포함됨
- 각종 훈련, 구제역·AI 대응실태, 건설공사현장,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물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해수욕장, 무더위쉼터 운영 및 관리 실태, 어린이 위험노출에 대한 사항을 포괄함
- 지역적으로는 대전 도안대교 설치 이슈와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 관련 감찰이 실시됨
- 2017년은 총 7건이 실시되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실태 점검과 사익추구로 인한 부패요인에 중점을 둠
 - 대형자동차 운행 관련 감찰, 한강유람선 스크류 손상 은폐 이슈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짐
- 2018년에는 구조적 부패유발 유형과 사익추구 유형에 중점을 두고 총 7건의 감찰이 이루어짐
- 구조적 부패 유발 유형으로는 2017년에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운영 실태, 과적차량 운행 실태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짐
- 사익추구 유형으로는 가스안전관리실태, 요양병원 등 안전관리 실태, 재난 복구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짐
- 2018년 10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안전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였음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안전취약요소를 중점 감찰하여 총 6,511건의 부패 사례를 확인
 -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과 안전규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총 123건의 안전분야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53개 제도개선을 완료
- 안전분야 부패근절 업무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 까지 전체 시도에 출범 완료

- 충청남도에서는 도, 시·군 안전감찰 담당자와 충남개발공사, 전문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기관 안전감시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반부패 활동 수행

5. 충청남도 감찰활동 이력 분석

-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충청남도가 시행한 안전감찰 활동은 총 14개 유형

<표 1> 2018-2020 충청남도 안전감찰 활동사례

시기	사례	목적	대상	비고
2018	야영장(캠핑장) 관리실태	야영장시설 이용객 증가 추세에도 일부 야영장의 안전관리가 미흡	5개 시군 야영장 및 미등록 야영장	
2018	펜션 가스 관리실태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 발생 이슈 대응	2개 시군 5개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대상 선정)	겨울철 관광객 집중지
2018	학교시설 관리실태	학교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도내 초등학교 409개소	
2018-2019	대설대책 추진실태	동절기 사고 사전 예방	8개 시군	
2019	하도급 및 건설업 등록실태	건설산업 시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등 안전을 담보로 이행되고 있는 적폐행위를 청산하여 행정의 신뢰회복과 안전 직거래 유도	5개 시군 건설공사 및 전문건설업체	
2019	건축자재 품질 및 다중이용복합건물 관리실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축공사장 자재품질 관리실태 및 다중이용복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	6개 시·군 건축현장(공공 2, 민간 11) 및 다중이용 복합건물(4)	
2019	수상레저사업 운영실태	수상레저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유도선 내 음주행위 등 이슈)	수상레저사업장 8개소(5개 시·군) 유도선 사업장	

			2개소(유도선 8척)	
2019	공공건축물 안전 및 감리감독 감찰	공공건축물 건축 인·허가 및 감리감독 기관의 안전무시 등 안전부패 의식에 대한 경각심 제고	충청남도 1개 사업소 및 5개 시·군	
2019-2020	제1,2,3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관리실태	안전부패 행위 근절 등 재해와 재난 사전예방	최근 5년간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13,271개	
2020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실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 확보, 운영자 경각심 고취 및 감독기관의 안전의식 제고	충청남도 4개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202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 이행실태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충청남도 15개 시·군	
2020	코로나19 해외입국자 등 자기격리 관리실태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충청남도 15개 시·군	
2020	여름철 내수면 수상안전 관리실태	2019년 시행 수상레저시설 안전감찰결과 후속조치 이행 확인 및 수상레저시설 안전 확보	충청남도 7개 시·군, 12개 사업장	
2020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해·재난 등 위험성이 상존하는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확보	총저수량 10만 ^m 이상, 안전등급(C-D) 저수지	

- 3년간 평균 4.6건의 감찰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찰 대상 유형도 레저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청소년 수련시설 과 건설 하도급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특히 펜션, 수상레저사업 운영, 코로나 19 관련 등 현안 이슈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감찰 활동이라 평가할 수 있음
-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여 여름철 내수면 수상안전 , 겨울철 대설 대책 등 전략적 추진 외에도 연례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요인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음
 - 특히 2019년 시행된 감찰 결과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일회적인 단속이 아님을 주지시켜 효과성을 제고하였음
-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강조되는 안전복지와 인구방어선으로서의 안전을

추구함에 있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감찰을 수행한 바 있음

- 언론보도 및 그동안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안전감찰 사례, 충남도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가장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노후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재난 지휘관 등 안전정책 전반의 관리와 어린이·청소년 관련 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관련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감찰 계획 수립에 안전사고 다발분야 및 부패 유형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사고 발생 원인 파악을 통한 예방적 안전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 초등학생 등 어린이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생활 불편해소와 생활안전 관심도가 높은 밀착형 집중감찰이 요구됨
- 향후 추진되는 안전감찰 활동에서는 기존의 감찰 활동과 차별화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와 도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감찰을 수행하여 전 영역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04

안전감찰 목표 및 기본 방향

1. 기본방향

● 안전의식 개선

- 우리 생활에 만연한 안전에 대한 경시는 경제발전과 성장 담론의 그늘에 가려진 인명경시와도 맞닿아 있음
- 사람중심의 도정지향과 도민의 행복 추구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복지 실현은 안전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 일방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려움
- 기업, 도민 각 분야 전 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안전감찰 활동의 방향이 됨

● 안전문화 확산

- 안전감찰의 기본 목적은 안전무시 관행을 탈피하여 생활속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있음
- 문화는 개인과 집단, 조직 내에서 모든 행동과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습관화되어 모든 구성원에게 통용되는 관습적 가치로 확정된 것으로,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한 학습이 체화되어 불편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견인함

2. 목표

-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고, 부패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감시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3. 추진전략

(1)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감찰

-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도민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식과 불안요인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소통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신뢰도 향상과 직결되는 것으로,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
 -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는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 강화 차원에도 기여함
- 안전관리는 필연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다소간의 불편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때 도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실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감찰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리과정이 형성되어야 함

(2) 4계절 즐거운 삶을 위한 감찰

- 기후변화에 따라 계절성 재난의 발생우려와 그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풍수해 등 재난관리를 위한 체계가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이 요구됨
- 충남도는 시군별로 사시사철 각종 축제가 개최되는 등 관광객 운집에 따른 시설안전은 물론, 코로나 19와 유사한 감염병 및 기축전염병 우려가 상존하여 관련 관리가 필수적임

(3)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찰

-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와 지역의 소멸위기를 불러오는 중요한 행정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정주여건의 고려사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특히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30 ~ 50대에서는 교육 문제와 함께 안전문제가 가장 큰 관심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어, 인구소멸 이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는 인구방어책으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음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분야 보호구역 관리가 필요함

1.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감찰

과제 ① 생활 밀착형 시설 안전관리(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감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2019. 3. 시행)에 따라 승강기 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권한이 시·도 지사에게 부여되었으며, 설치 공사 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때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승강기 설치와 안전관리에 대한 시·도 지사의 책임 범위가 확장되었음
- 전국적으로 승강기 설치 대수는 2019년 70만대를 돌파한 이후, 2020년 9월 30일 현재 742,090대로 충남지역의 승강기는 전국 4.4% 수준인 총 32,294대가 설치 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220건의 승강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15명이 사망하였음
 - 도내에서는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등 증가추세에 있음
 - 고층건물이 급증하고있는 국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
- 승강기 중대고장 원인은 부품이상으로 전체의 42%에 달함
 - 그 외, 건축물전원차단, 누수, 침수 등 기타원인이 27%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정불량이 세 번째 원인(21.5%임)
- 승강기 관리업체에서는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점검만으로도 모든 항목에 대한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허위기재하는 사례 등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허위 자체점검 실시 및 입력사례
- 승강기 기계실 내 권상기 오일 누유방지 등 유지관리 부실사례
-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사례
-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작성 사례
-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
- 비상통화장치 불량 사례
-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의 미입회 사례
- 승강기 사고는 이용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함
- 2015년 이후 엘리베이터 설치, 교체, 유지관리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가 35명에 달하는 등 1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승강기 점검 중 안전수칙 미준수 및 이용자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

과제 ②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 도,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 소홀로 배수로 철망 도난이나 화물차 및 버스, 장기 주차 또는 방치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은 물론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
- 전기 배선에 쌓인 각종 먼지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주차장 관리사무실 주변과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법 설비를 설치·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적시에 점검하지 않거나 고장을 방치하여 안전을 위협받거나, 도난 등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우려가 큼
- 공영주차장 표지판 등 주차장 설비,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불법 적치물 및 폐기물과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이 추락하거나 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교통안전공단의 전국점검 결과는 50% 가량이 운영중단에 이를 정도의 수준으로 도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사망사고 30건 발생하였으며, 출입문과 안전센서 상태가 기준에 못미치거나 바닥에서 차량을 지탱하는 운반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음
- 지자체의 단속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이행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과제 ③ 하천수문 운영관리 실태 감찰

-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등 홍수위험이 증가함
- 그동안 배수시설 운영방식은 마을이장 등 인근 지역주민을 민간 수문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민간 수문관리인이 직접 현장에서 조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이러한 방식은 수문관리인의 고령화, 전문성 부족, 피해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 등의 문제를 드러내었고, 특히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 현장 출동 과정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함
- 2019년부터 하천의 수문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체 하천에 설치되지는 못한 실정임
- 또한 하천 또는 제방에 설치된 수문의 적절한 개폐 조작을 통해 수문을 활용한 자연배수를 늘리고 펌프에 의한 강제배수를 줄이는 등 배수펌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문과 펌프장 간 상호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한 배수펌프장 운영편람에 기초하여 하천 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감찰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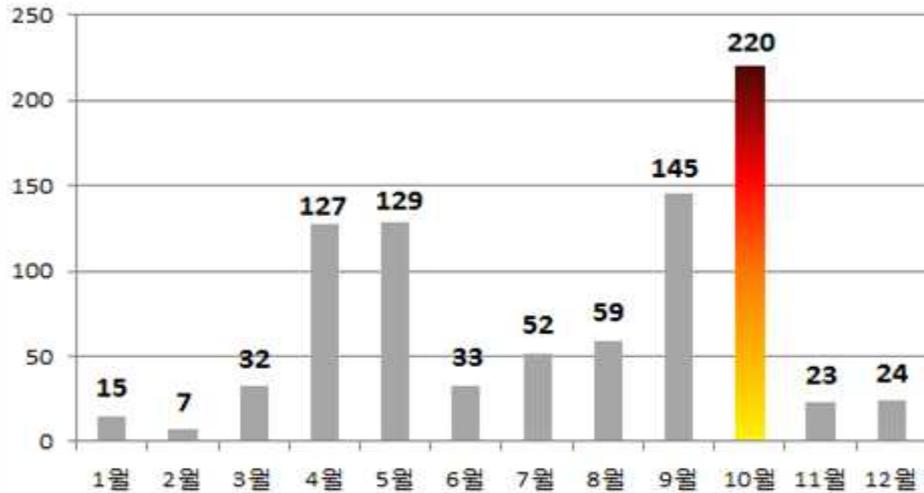
2. 4계절 즐거운 삶을 위한 감찰

과제 ① 축제 안전관리 실태 감찰

- 전국적으로 지역단위 축제는 2019년 기준 총 890건에 달하며, 축제가 가장 많은 기간은

4~5월과 9~10월로 봄·가을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10월 한달 동안만 전체의 25%인 220건이 개최됨



[그림 9] 2019년 월별 전국 축제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충남지역은 2019년 기준 총 90건의 축제가 개최되며, 시군별로는 보령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서산이 11건, 공주와 당진이 각각 10건씩 개최됨
 - 금년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않거나 축소된 경우가 있어 19년 통계를 활용하였으나, 향후 집합이 가능해지면 유사한 형태의 시군 지역 축제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에는 적게는 10만~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다중이 모이는 축제 장소에서 사고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축제 장소의 시설은 대부분 임시시설로, 전기나 가스를 이곳저곳에서 끌어와 기본적인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며, 무대와 조명탑 등 구조물도 일시 고정된 것으로 붕괴 위험이 높음
 - 화재나 인명피해 발생시 소방 및 구급차량의 출동로가 관광객 차량에 막혀 진입이 어려운 문제도 발생함

<표 2> 국내 다중밀집사고 현황

사고명	연월	사고경위	사고유형	인명피해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 압사	92.02	외국유명가수 공연도중 팬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나오다 압사사고 발생	연쇄전도 압사	사망1 부상60
대구 시민운동장 압박사고	95.10	콘서트 공연 중 관객이 한꺼번에 입장하려다 부상	연쇄전도	부상8
대구 MBC 공개홀 압박사고	96.12	공연도중 팬들이 무대로 몰리면서 부상 사고	연쇄전도	부상2
전남 순천실내체육관 압박사고	98.12	콘서트 도중 가수에게 한꺼번에 팬들이 몰려 사고	연쇄전도	부상10
충북 청주 종합운동장 압박사고	04.06	공연장 입장 중 뒷사람에게 밀려 부상 사고	연쇄전도	부상13
경북 상주 콘서트 압박사고	05.10	운동장 출입구 문을 여는 순간 앞에서 입장하던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사고	집단패닉 및 혼돈	사망11 부상70
서울 롯데월드 군집 안전사고	06.03	관람객이 한꺼번에 앞으로 밀리면서 기물파손, 인명피해	붕괴파손	부상35
경남 창녕 화왕산 역사태우기 축제사고	09.02	관람객 쪽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불길에 휩싸이거나 도망가나 절벽에서 추락	낙하 화재혼돈	사망7 부상340
경기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14.10	야외공연장 공연도중 환풍구 덮개 위의 관람객이 추락	붕괴낙하 시설물 파손	사망16 부상11
부산 부경대 축제 추락사고	16.05	대학생들이 채광창위에 올라가 관람하던 중 채광창이 무너지며 추락	붕괴낙하 시설물 파손	부상2

- 축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여부는 물론, 지역축제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합동 현장점검 의무 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함

과제 ② 체육시설 안전 감찰

-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 삶의 질적 향상 욕구 증폭으로 인하여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체육시설이 여가시간 활용의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

-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역할 이면에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같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체육시설 자체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안전 확보가 요구됨

- 충남의 체육시설은 총 1,099개소로,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이 731개소로 가장 많으며, 게이트볼장 201개소, 체육관 46개소, 테니스장 29개소, 국공장 20개소, 축구장 19개소, 육상경기장 15개소, 야구장 11개소, 수영장 6개소, 롤러스케이팅장 5개소, 하키장 2개소, 사격장 2개소 등이 있음
- 이들 시설에는 체육시설 규격품 설치 기준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안전시설 관리조치, 안전취약지 공정관리, 현장 품질관리, 안전점검 이행여부, 시설·운영기준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함
- 비상연락체계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됨

3.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찰

과제 ①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관리 감찰

- 어린이, 노인 등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함
-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은 42개소로, 최근 3년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위험이 높아 중점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를 포함해 충남에서는 아산시 용화초교, 서산시 서산초교가 대상이 됨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중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거나 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카드 기재가 불일치하는 등의 관리 소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2011년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등 보호구역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감찰 대상이 됨
 - 다만, 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하여 운전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거나 보호구역을 인접 보호

구역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통행차량 시야 미확보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범집행이 필요한 구간임에도,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가중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 감찰이 요구됨

06 결론

1. 요약

- 이상에서는 안전 환경 진단과 대형사고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충남도가 2021년 안전감찰활동을 위하여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함
- 사회시스템의 변화와 기술수준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신종재난의 증가와 대형재난 확대로 이어졌으며,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비율이 확대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시함

● 급증하고 있는 대형사고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첫째,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 둘째,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 셋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
 - 넷째,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대처
 - 다섯째, 비리와 부실이 정상이 사회 풍조
-
-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적되는 안전부패유형과 우리도의 안전신문고 신고사례, 도민의 견수럼 결과를 종합하여 만연한 생활 불법 요소를 찾아 처벌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함
 - 특히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사례를 돌아보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위험관리 부담과 책임에 대한 전가문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안전을 담보로 한 사익 추구 행태를 지적함

2. 안전감찰 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

-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안전을 해치는 불법관행을 근절한다는 방향 하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패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도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추진전략

- 첫째,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감찰
- 둘째, 4계절 즐거운 삶터를 위한 감찰
- 셋째,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찰을 제시함

● 실행과제

(1)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감찰

- 생활 밀착형 시설 안전관리(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감찰
-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 하천수문 운영관리 실태 감찰

(2) 4계절 즐거운 삶터를 위한 감찰

- 축제 안전관리 실태 감찰
- 체육시설 안전 감찰

(3)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찰

-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관리 감찰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 안전 부패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일종의 생활 적폐라 할 수 있으며, 관행으로 이어진 습관은 단시간 내 해소하기 어려움

-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태도, 비리와 부실이 정상으로 치부되는 사회풍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대형사고 예방은 요원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부패를 뿌리 뽑고, 만연한 불법 요소를 근절하려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감사원. 감사총괄 및 안전분야 감사사례(총괄). 20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2014.
- 고민서. 재난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 연계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7.
- 국토교통부. 20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김기욱·이정석.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감찰 방안 연구. 2019. 부산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안전부패 사례를 통한 안전감찰업무의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 안전부패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2018.
- 행정안전부. 범정부 안전부패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8.
- 행정안전부. 2018. 안전부패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2018. 범정부 안전부패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행정안전부. 2019. 안전감찰 사례집(Ⅲ).